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1. 한변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및 대통령의 친분을 이유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과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2. 야당은 오석준 후보자가 과거에 버스운임을 2회에 걸쳐 합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비정하거나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판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무시한 불합리한 주장이다. 그 판결은 버스기사들이 운임을 몰래 횡령하는 사고가 빈발해서 버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 배경의 산물이었다.

당시 버스회사들은 횡령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심지어 버스마다 전담요원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야당이 문제 삼은 판결의 사안과 같이 버스기사가 버스운임 6,400원 중 400원씩을 반복적으로 착복하게 되면 결국 버스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사실상 소멸하기 때문에 버스회사로서는 부득이 단체협약에 “운송수익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지부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노사합의서에도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고한다” 라고 기재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의 경우는 운임을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착복한 증거가 분명한데다, 해당 버스기사가 입사 당시 운송수입금 횡령시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해고 결정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판결의 당사자인 버스기사가 해당 1심 판결에 승복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야당이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횡령 금액만을 강조하면서 판결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질서의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3. 또한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에서 25년간 근무한 남자직원이 2019년경 비즈니스석 승객이 남기고 간 생수 1병을 몰래 가져갔다가 해고되었는데 네덜란드의 제1, 2심 법원에서 모

두 직원의 횡령에 대한 운송회사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e) 및 그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4. 그 외에 오석준 후보자가 2010년경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 2011년경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도 수 차례 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 후보자가 사용자 또는 강자에 치우친 법관이라는 야당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5. 그리고 윤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5회 이내로 만난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두텁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건국 이래 현직 법관인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퇴하거나 국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하여 대법관으로 제청된 인물이 아닌가.

한번도 오석준 후보자의 몇몇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대법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쟁과 멀어야 할 대법관의 임명 동의 절차에서 부당하게 대법관의 공석을 장기화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야당은 대국적 견지에서 조속히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22. 9.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